

비상경제장관회의

23-27-1

(공개)

#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

2023. 11. 27.

관계부처합동

#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(요약)

## I 추진방향

- 신산업분야 현장규제 20건을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해소하는 한편,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규제개혁시스템을 개선
  - 그간 현장방문, 기업 및 경제 협·단체 간담회\* 등을 통해 바이오·헬스케어 등 4개 분야 규제 20건 발굴·개선방안 마련 ⇨ 속도감 있게 개선 추진
    - \* 중기중앙회,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간담회 및 바이오헬스, 에너지, 모빌리티 등 분야별 간담회 개최
  -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사항을 공개하는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구축 ⇨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
    - 또한,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방안 마련

## II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

### 1 바이오·헬스 분야 (4건)

- 기술발전 등에 맞춰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 관리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 (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)하고 범위를 확대
-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\*하고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, 국민 의료 접근성 개선 및 건강 증진에 기여
  - \* 현재 의료법 개정안(이종성의원 발의)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계속심사 중
-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연구시설 공동 설치·사용을 허용하고,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심사 대상을 확대\*
  - \* (現)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이 없는 경우 (改)기존 치료제 대비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경우 포함

### 2 무탄소 에너지·환경 분야 (7건)

-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\* 등을 포함한 태양광·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 리파워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
  - \* (태양광) 기도입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적용유예 도입 (풍력) 이격거리 규제현황 등 조사

- 탄소포집산업 관련 산업특수분류를 신설하여, 탄소포집 관련 기업(CCUS\*)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신규 투자 촉진
- \* Carbon Capture, Utilization, and Storage: 이산화탄소 포집·활용·저장
-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수소연료전지를 포함한 새로운 비상전원으로 활용 가능한 전력 공급원에 대해 종합적 검토 추진
-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신성장·원천기술로 지정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
- 발전공기업의 경영평가지 국내기업과의 동반 해외진출, 판로지원 등을 평가하여 국산기자재 활용 유도
- 직접 전력구매계약(PPA) 계약 관련 부가세 납부절차를 간소화하고, 가상전력구매계약(VPPA)상 REC 계약관련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화

### 3 미래형 모빌리티·로봇 분야 (7건)

- 우체국 등 택배·물류분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\*를 도입하고, 치안·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확대 검토
- \*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만 사용자가 소유하고 공유 배터리를 장착하여 운행  
→ 충전이 필요한 경우 배터리 교환시설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교체
- 서빙로봇 보급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우수 중소 제조사 중심으로 선정되도록 개선하여 우수 로봇제조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,
  - 서빙·배달 등 로봇에 대한 관세통계품목분류(HSK\*) 코드를 신설하는 등 로봇산업 통계 분류체계를 개선
- \* 세계관세기구(WCO)에서 정립된 국제기준인 HS 코드를 관세청이 국내 정책 목적에 맞게 세분류한 코드 체계
- 전기차 성능 측정을 위한 배터리 전압측정방식을 개선\*하고, 高고도 드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도권 드론 비행시험장의 최대 비행고도를 상향 추진하는 것을 검토
- \* (現)형식승인(환경부)을 받은 검증된 전용장비로만 측정 가능 → (改) 자기진단장치도 가능

### 4 콘텐츠 분야 (2건)

- 방송영상 등을 통해 기송출한 광고의 영화관 상영시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, 기타 광고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등으로의 전환을 검토

- 게임물의 경미한 내용수정시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\* 통과를 지원하고, 법안 관련 세부내용을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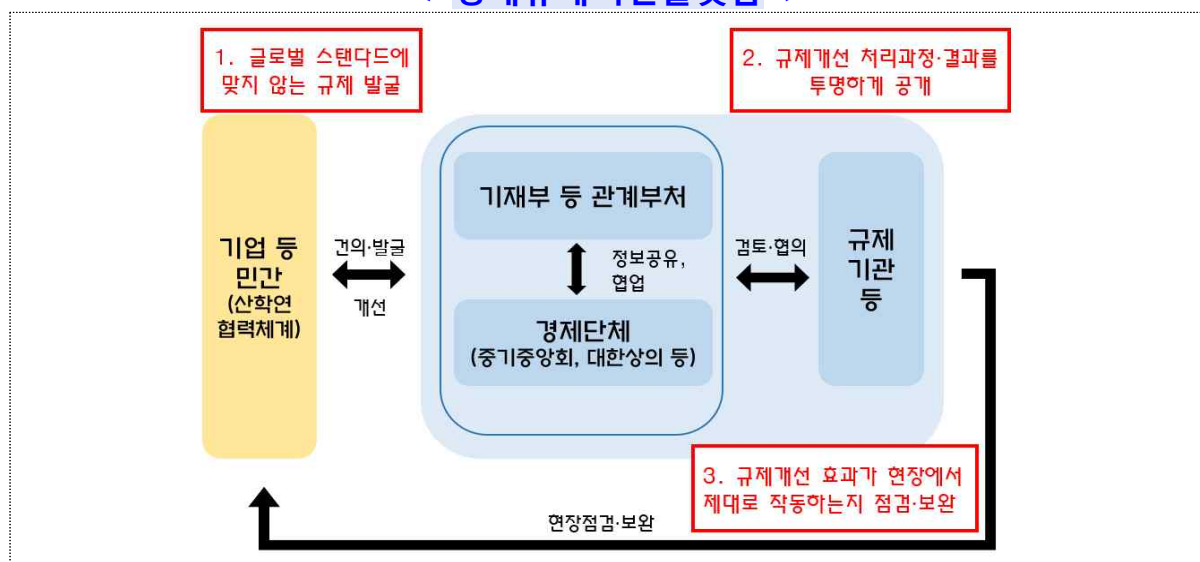
\* 현재 게임산업법 개정안 2건(이상헌·류호정의원 발의)이 국회 문체위에 계류중

### Ⅲ 규제개혁시스템 혁신

#### 1 경제규제혁신플랫폼 구축·운영

- 중기중앙회, 상의 등과 공동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상황을 공개하는 경제규제혁신 플랫폼을 구축

##### < 경제규제혁신플랫폼 >



- 1 기업, 경제단체, 업종별 협회, 학계 등 산학연 협력체계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발굴
  - 2 발굴된 규제는 규제기관의 검토, 관계기관 협의 등 처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
- \* 14일 이내 검토 완료(14일 이내 1회 연장 가능)후 결과 공개, 규제 준치 필요시 규제기관이 3개월내 소명
- 3 경제협·단체, 관계부처 등과 공동으로 규제개선 효과의 현장 작동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 마련

#### 2 규제샌드박스 개선방안 마련

- 기발표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실증기간 만료 임박과제 관리시스템 개선
- 규제샌드박스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방안 마련

# 순 서

I . 추진방향 .....	1
II .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.....	2
1. 바이오·헬스케어 .....	2
2. 무탄소에너지·환경 .....	4
3. 미래형 모빌리티·로봇 .....	8
4. 콘텐츠 .....	12
III . 규제개혁 시스템 혁신 .....	13
IV .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.....	15

## I. 추진방향

### □ 국가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, 무탄소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가속화

○ 국가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혁신 긴급

- 주요 선진국들은 로드맵 마련\*, 규제개혁\*\*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가간 경쟁 심화

\* (예) (EU) Horizon Europe, (일본) Moonshot 프로그램, (독일) High Tech Strategy 2025

\*\* (예) 21세기 치료법(美): 신약과 의료기기 승인절차 대폭 간소화,  
EU CHIPS(EU): 반도체 통합생산설비 등 기준심사 Fast-Track 도입

- 우리 정부도 신성장 4.0 전략 추진, 규제혁신·현장으로 해소 노력을 통해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역량 집중

\*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(22.7.27),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(22.9.19),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정책(22.11.9), 신산업 투자촉진 현장애로 해소방안(8.17일), 기업현장규제 개선방안(10.5일) 등

### □ ①신산업분야 현장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개선하는 한편, ②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중기중앙회·상의 등과 공동 구축·운영

① 그간 현장방문, 기업 및 경제 협·단체 간담회\* 등을 통해 바이오·헬스케어 등 4개 분야 규제 20건 발굴·개선방안 마련 ⇨ 속도감 있게 개선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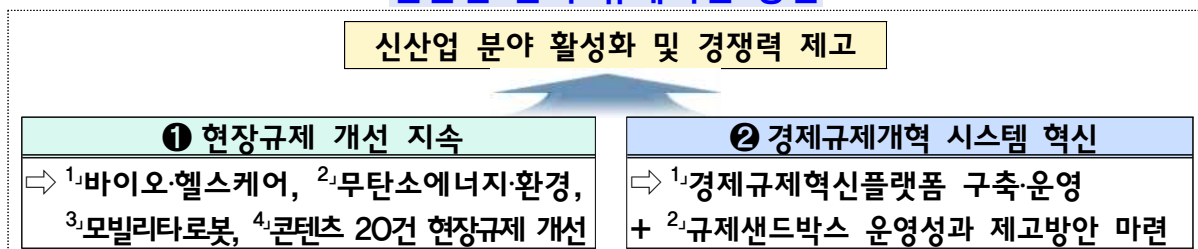
\* 중기중앙회,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간담회 및 바이오헬스, 에너지, 모빌리티 등 분야별 간담회 개최

②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·해소하는 경제규제 혁신플랫폼을 공동 구축 ⇨ 전방위적 규제개혁 가속화

- ①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발굴, ②규제개선 처리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, ③현장 작동여부 점검을 통해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

※ 신기술·서비스의 조속한 검증 및 시장화 지원 등을 위해 신산업 육성의 핵심 기제인 규제샌드박스의 제도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방안 마련

#### <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>



## Ⅱ.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

### ◇ 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현장규제 4개 분야 20건을 발굴신속하게 해소

#### 1 바이오·헬스케어 분야

##### ①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비의료 기준 명확화

- (현황) 건강관리서비스가 다양화됨에 따라 각 서비스가 의료법상 의료행위(의료인만 수행 가능)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\* 존재
  - \* 유권해석 건수 : ('19) 6건 → ('20) 20건 → ('21) 10건 → ('22) 7건 → ('23) 4건
  - 이를 위해, 복지부가 「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」을 발간\*하고 있으나, 기술 트렌드·해외사례 등을 반영한 개정 요구 지속
  - \*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(1차) 발간('19) → 2차 발간 ('22)
  - 사업 불확실성으로 관련 기업들의 시장진입이 지연되어 산업발전에 제약
- (개선) 기술발전 등에 맞춰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를 확대

⇒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 
新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

[조치계획] 「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」 개정  
(‘24.1분기 기업 수요조사·의견수렴 → ‘24년내 가이드라인 개정)

##### ②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

- (현황) 의료법은 의사·환자간 비대면진료를 금지 → 시범사업으로 제한적 허용중\*+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심사중\*\*
  - \* (코로나 시기 한시적 비대면진료, '20.2~'23.5) 초진·재진, 의원·병원, 약배송 제한 없음 (비대면진료 시범사업 '23.6~) 의원·재진환자 중심 허용, 초진 제한적 허용(섬벽지, 장애인 등)
  - \*\* 현재 의료법 개정안 6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('23.3월) 및 계속심사중
  - 코로나시기('20.2~'23.5월) 대상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경험\* 등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 지속
  - \* 1,419만 명 대상 3,786만 건 실시, 의원급 의료기관 87.1%(코로나19 제외, 건수 기준)

-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 등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필요

\*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·상담제공 서비스 관련 규제샌드박스 28건 승인

○ (개선)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,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

- 대상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 개정 추진
- \* 현재 의료법 개정안(이종성의원 발의)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계속심사중
- 국민 불편 해소,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,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시범사업 보완 추진

⇒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및 제도화를 통해 국민 의료 접근성 개선 및 건강 증진에 기여

**[조치계획]**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+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마련('23년)

**③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\* 연구시설 공동 설치 및 사용 허용**

\* **L**iving **M**odified **O**rganisms: 생산량 증대 등을 위해 유전공학기술을 적용해 유전자를 섞거나 변형시켜 개발한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형질을 지닌 생물체(예: 유전자변형 콩 및 옥수수 등)

○ (현황)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연구시설의 공동 설치·사용이 금지되어 기업들은 고비용의 시설구축비 부담

- 유사한 법률인 「감염병예방법」의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·사용할 수 있도록 既개정('21.10월)

○ (개선)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·실험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·사용할 수 있도록 「유전자변형생물체법」 개정

⇒ 관련 분야 기업의 별도 시설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 활성화 등에 기여

**[조치계획]** 「유전자변형생물체법」 개정안 발의('24년)



#### 4 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심사 대상 확대

- (현황) 침단재생바이오의약품의 빠른 허가·심사를 위해 신속 처리제도(심사기간 115일→90일)를 운영중이나 그 적용대상이 제한적  
\* ① 대체치료제가 없고 중대질환 치료 목적, ② 희귀질환 치료 목적, ③ 감염병 예방치료 목적
  - (개선) 현행 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대상 중 '대체치료제가 없는 경우'에 대한 해석 범위를 확대
    - (현행)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이 없는 경우에서 (확대) 기존 치료제 대비 안전성·유효성이 개선된 경우까지를 포함
- ⇒ 침단바이오의약품 허가·심사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제약기업 허가·심사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

[조치계획] 「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·심사규정」(식약처고시) 개정('23.11월)

## 2 무탄소 에너지·환경 분야

### 1 무탄소에너지 리파워링\*(성능 개선) 활성화

- \* 초기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부품을 교체하여 용량과 효율을 향상시키는 행위
- (현황) 태양광, 풍력 등 무탄소에너지 발전설비는 이격거리\* 규제 등으로 기존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리파워링(성능 개선) 추진에 애로  
\* 각 지자체에서 태양광 설비 등을 최초 설치한 이후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도입 중, 지자체별로 주거지역·도로 기준으로 100~1,000m 등 이격거리 기준이 상이
  - (개선)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을 포함한 태양광·풍력 등 리파워링 활성화 방안 마련
    - 태양광 발전설비는 既도입한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적용유예 규정 도입 등을 유도하고, 풍력 발전설비는 리파워링 관련 규제 현황 및 제약 요인 등을 조사 후 애로 해소방안 검토
- ⇒ 동일면적 대비 에너지 발전량이 크게 증가(2배 이상)하여 NDC 목표 이행\*과 질서 있는 국토관리에 기여
- \*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: 2018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% 감축

[조치계획]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리파워링 활성화 방안 마련('24.1분기)

## ② 탄소포집 관련 기업(CCUS\*)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

\* 이산화탄소 포집·활용·저장(Carbon Capture, Utilization, and Storage)

- (현황) 이산화탄소 포집·활용·저장(CCUS) 기술개발 및 제조시설은 표준산업분류체계상 업종분류가 모호\* → 산단 공장용지 입주 곤란

\*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제조·폐기물 처리·원료재생업 등으로 분류

- (개선) 탄소포집산업 관련 산업특수분류\*를 신설하여 관련 기업의 조속한 산업단지 입주 지원

\* 경제·사회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 해당하는 표준 분류 항목을 발체 또는 재분류하여 작성

⇒ 신산업인 CCUS 업계의 산업단지내 신규 투자를 촉진하여, 산업단지 탈탄소 전환 기반 마련

[조치계획] CCUS 산업 관련 산업특수분류 제정('24년)

## ③ 수소연료전지 등 비상전원 포함 검토

- (현황)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\*에는 승강기와 소방설비에 비상전원\*\*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, 수소연료전지는 비상전원에 불포함

\* 30층 이상 건물은 피난용 승강기/7층 이상 건물은 옥내소화전에 대해 전용 비상전원 설치 의무

\*\* 디젤·가솔린·가스터빈 등 내연기관 및 축전지 등을 비상발전기로 규정

- 비상전원이 디젤엔진 위주로 보급되고 노후화 되어 있어 대기 오염물질 다량 배출 등 환경에 악영향

- (개선)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수소연료전지를 포함한 새로운 비상전원으로 활용 가능한 전력 공급원에 대해 종합적 검토 추진

⇒ 수소 활용 기반 확대와 함께 오염물질 배출 감소에 기여

[조치계획] 현장실사('24.1분기) 등을 통해 신규 발전원의 비상전원 포함 적정여부 검토('24년)

#### 4 저탄소 항공연료 세제지원 확대 검토

- (현황) 글로벌 친환경 항공연료 전환 추세\*에 따라 국내기업은 저탄소 항공연료\*\* 생산을 위한 초기 투자계획 마련 중

\* (프랑스) '22년부터 항공유에 저탄소 항공연료 1% 혼합의무 시작,  
(EU) '25년부터 저탄소 항공연료 2% 혼합의무를 시작하여 점차 확대 예정

\*\* 옥수수·폐식용유 등에서 얻은 원료를 발효시켜 생산한 연료 등

- (개선)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신성장·원천기술로 지정 검토

⇒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저탄소 항공연료 투자 촉진

[조치사항]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개정 검토(∼'23.12월)

#### 5 발전공기업 경영평가시 국산 기자재 활용 여부 반영

- (현황) 해상풍력 발전 관련 공급망 자립도를 확충하기 위해 대기업·발전공기업 수요 기반 국내 부품업체 성장 필요

- 그러나 현재는 발전공기업의 국내외 발전사업 추진시 가격 경쟁력이 낮은 국산 부품에 대한 활용 유인 부족

- (개선) 발전공기업의 경영평가시 국내기업과의 동반 해외진출, 판로지원 등을 평가하여 국산기자재 활용 유도

⇒ 국산 신재생에너지 부품 수요 확충 및 국내 공급망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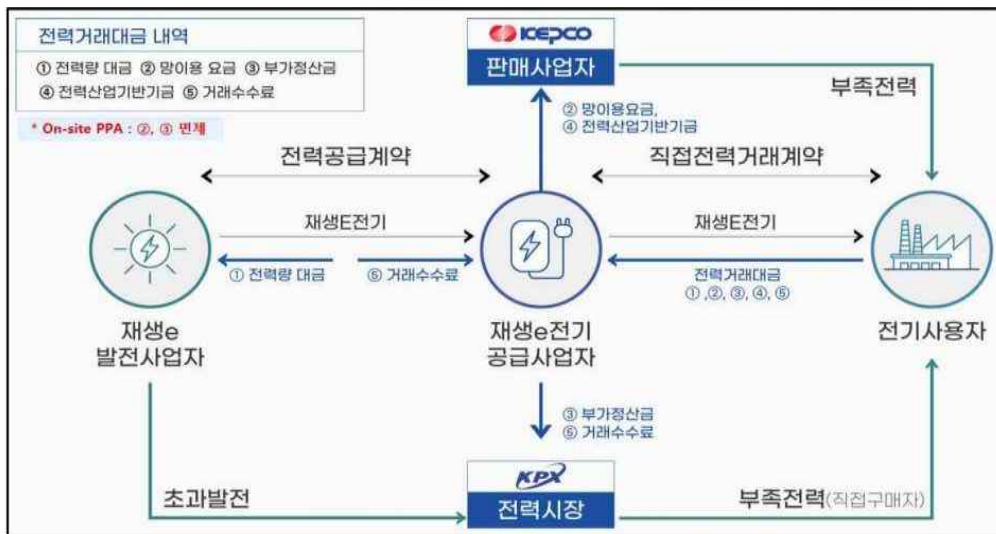
[조치사항] 발전공기업 경영평가시 국내기업과의 동반 해외진출, 판로지원 등 평가('24년)

## 6 직접 전력구매계약(PPA) 계약 관련 부가세 납부절차 간소화

- (현황) 직접 전력구매계약(PPA<sup>1)</sup>) 전기사용자는 전력거래소·한전 거래대금 5종<sup>2)</sup>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<sup>3)</sup>를 통해 납부

- 1) **Power Purchase Agreement**(전력구매계약):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기업과 발전사업자 간 직접 전력조달계약을 체결하여 필요 전력 충당
- 2) ①**전력거래소**(거래수수료, 부가정산금), ②**한전**(망 이용요금 3종, 발전측·수요측 송전, 배전고압)
- 3)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재생에너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로, 재생에너지 전력의 구매,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정산 등을 담당

### < 직접 전력구매계약 전력거래대금 흐름도 >



- 그러나,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전력거래소·한전이 전기 사용자에게 발급해, 전기사용자의 부가세 납부절차가 복잡

- (개선) 전력거래소·한전 세금계산서를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자에게 일괄 발급하여 거래대금·부가세 납부창구 일원화

⇒ 직접 전력구매계약 전기사용자의 행정절차 편의 제고

**[조치사항]**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69조 개정('24년)

→ 직접 PPA의 전기공급사업자(대리인)가 세금계산서를 발급·수취하도록 규정 신설

## 7 가상전력구매계약(VPPA)상 REC 계약 관련 회계처리 기준 마련

- (현황) 가상전력구매계약(VPPA)상 REC 계약에 따른 대금 지불·수령시 관련 기업회계 처리기준 불명확\* → 기업간 정산 등 지연

\* REC 가격 및 전력가격이 경제적 특성이나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할지 결정하도록 함(K-IFRS 제1109호)  
→ 회계상 ①파생상품 또는 ②일반 계약으로 인식 가능

- REC 계약을 ①파생상품으로 인식할 경우 자산으로 처리하고, 파생상품이 아닌 ②일반적 계약과 같이 취급할 경우 비용으로 처리

### ※ (참고) 가상전력구매계약(VPPA)

- ▶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기업과 발전사업자 간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금융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업이 발전사업자의 리스크를 일부 부담하고,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얻는 방식

- (개선)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상전력구매계약상 REC 계약 관련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화(회계기준원)

⇒ 가상전력구매계약 체결시 회계처리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에 기여

[조치사항] 협회·유관기관 통한 회계쟁점 및 처리필요사항 구체화(∼'24.上) → VPPA 관련 회계기준 적용의견서(질의회신) 마련(∼'24년)

## 3 미래형 모빌리티·로봇 분야

### 1 공공부문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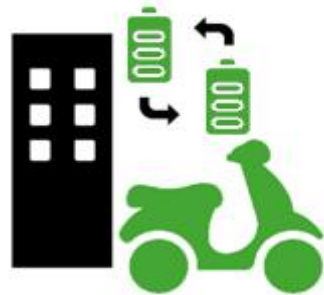
- (현황) 기업들은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\* 보급 확대를 통한 친환경 모빌리티·물류 활성화를 추진중

\*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만 사용자가 소유하고 공유 배터리를 장착하여 운행  
→ 충전이 필요한 경우 배터리 교환시설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교체

- 하지만, 배터리 교환형 이륜차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\* 등으로 물류현장에의 조속한 도입에 애로

\* 음식 등 배달업계는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서비스의 효과성 검증 부재, 기존 내연 이륜차 교체주기 미도래 등으로 배터리 교환형 이륜차로의 본격 전환에 소극적

- (개선) 우체국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하여 민간부문으로 확산 유도
  - 택배·물류용 이륜차 등 공공부문 차량을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로 우선 전환('24년~)하고, 치안·사회복지 등으로 확대 검토
- ⇒ 친환경 모빌리티·물류서비스로의 전환 가속화

내연 이륜차	일반 전기이륜차	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
		
친환경 X	친환경 O	친환경 O
짧은 급유시간 긴 주행거리	긴 충전시간(2~3시간) 짧은 주행거리(70km이하)	신속한 배터리 교환*을 통해 장거리 주행 가능

\* 편의점 등에 설치된 배터리 교환기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교체하여 충전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(2~3시간 → 3분 이내)

**[조치계획]** 공공부문 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수요처 발굴 및 보급('24.1분기)

## 2 서빙로봇 보급지원 사업을 통한 우수 제조사 육성

- (현황)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서빙로봇 구매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\* → 우수 로봇 제조 중소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
- \* (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) 서빙로봇 구매 시, 구매비용 최대 70% 지원(20년~) 중이며 구매지원 대상 제품은 평가를 통해 사전에 선정
- (개선) 지원 대상 서빙로봇 제품 선별시 우수 중소 제조사 중심으로 선정되도록 개선

⇒ 정부지원사업 내실화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

**[조치계획]** '소상공인 스마트상점' 누리집에 제품 등록 시 평가 절차 개선('24년)

### ③ 서비스용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봇산업 통계 분류체계 개선

- (현황) 관세통계품목분류(HSK\*, 관세청) 내 서비스용 로봇 분류 코드가 부재하여, 서비스용 로봇의 정부지원 신청, 사업자 등록 및 로봇산업 통계관리 등에 애로

\* 세계관세기구(WCO)에서 정립된 국제기준인 HS 코드를 국내 정책목적에 맞게 세분류한 코드 체계

- (개선) 서빙·배달로봇에 대한 관세통계품목분류(HSK) 코드 신설을 추진\*하고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용 로봇 전체에 대한 코드 신설 검토\*\*

\* 현재 세계관세기구에서 식당 서빙로봇과 실외 배달로봇을 '적하·양하용 기계'에 해당하는 HS 8428.90호로 분류하기로 논의중('23.9월~)

\*\* 세계관세기구 논의를 통해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국제 HS 코드 신설 방안 마련 필요

⇒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원활한 정부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용 로봇시장 활성화·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

[조치계획] 서비스용 로봇 HSK코드 신설방안 관련 관계부처 협의('24년)

### ④ 전기차 성능 측정의 효율화를 위한 배터리 전압측정방식 개선

- (현황)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산정을 위한 배터리 전압 측정시 형식승인(환경부)을 받은 검증된 전용장비만 사용가능

- 고전압 배터리와의 전선 직접 연결 등 안전상 문제가 있어 특정 인증을 취득한 소수 기술자만이 측정 가능 → 시간·인력상 제약

- (개선) 자기진단장치(OBD)\* 사용·측정의 유효성 검토를 거쳐, 유효성 입증시 자기진단장치를 활용한 전압 측정을 허용

\* OBD(On Board Diagnostics) : 차량의 전기·전자적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하기 위한 장치  
→ 별도의 전용장비 설치 필요 없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배터리 전압 측정 가능

⇒ 전기차 성능 측정 절차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

[조치계획] 유효성 검토('24.上)를 거쳐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('24년)



## 5] 도급승인 심사서류 간소화

- (현황) 유해·위험 화학설비 설치·변경 등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항목과 유해·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한 도급승인 심사항목\* 중 일부가 중복되어 업무부담 과중 및 비효율 발생

\* 도급승인 신청 시 ①도급대상 작업의 공정관련 서류 일체, ②도급작업 안전 보건관리계획서, ③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

- (개선) 도급승인 심사 서류 중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서류와 중복 되는 서류\*는 공정안전보고서 서류로 같음

\* 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, 장치 및 설비사양, 유해위험물질 목록 등

⇒ 산업현장에서의 도급승인 절차 관련 기업 행정부담 완화

[조치계획] 「도급금지·도급승인 운영지침」 개정('23년)

## 6] 高고도 드론 비행시험 인프라 확충

- (현황) 수도권 高고도(1km 이상) 비행시험장이 부족해 드론을 개발·조립하는 곳으로부터 시험장까지 운송에 많은 비용 소모

- (개선) 수도권 드론 비행시험장\*(인천, 화성)의 인접 민·군항로와의 중첩성·비행 안전성 등 분석 후 최대 비행고도 상향 추진 검토

\* (인천, 화성) 현재 특별비행승인시 고도 약 300m(1,000ft)까지 주행 가능

⇒ 국내기업의 드론 제작 활성화 및 드론 활용 新서비스 발전 기반 마련

[조치계획] 수도권 드론 시험장 인접 민·군항로 안전성 검토 추진('24.上)

## 7] 농업용 드론 관련 지자체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

- (현황) 각 지자체는 '농업용 무인항공기 보급사업'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보조금 지원 중

- (개선) 농업용 드론 지자체 보급사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후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 드론 생태계 동반성장 관련 항목 반영 검토 추진

⇒ 국내 농업용 드론 산업생태계의 안정적 조성

[조치사항] 농업용 드론 지자체 보급사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('24.上)

「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」 지표에 드론 생태계 동반성장 관련 내용 반영 검토('24.上)



## 4

## 콘텐츠 분야

## ① 영화관 광고 사전심의 완화

- (현황) 「영화비디오법」에서는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
  - 기존 방송영상을 통해 송출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경우조차 별도 사전심의 대상
- (개선) ① 방송영상 등을 통해 既송출한 광고의 경우 영화관에서 상영시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,  
 ② 기타 광고의 경우에도 자율규제 등으로의 전환 검토  
 ⇒ 불필요한 심의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영화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

[조치계획] ①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개정(예외규정 마련, '24년)  
 ② 영화관 광고의 자율규제에 대한 연구용역 시행('24.1분기)

## ②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대상 및 범위 명확화

- (현황) 「게임산업법」에서는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수정 시 24시간 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
  - 신고 범위는 게임물의 기술적 보완·개선 외 모든 사항으로, 아이템 추가·캐릭터 수정 등 단순한 경우도 신고 대상
  - 현재 경미한 수정에 대한 신고 제외를 위한 「게임산업법」 개정안\* 문체위 계류 중 → 법안 관련 세부 내용 마련 필요
- \* 이상헌의원 발의안, 류호정의원 발의안
- (개선)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,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“경미한 수정 범위”를 조속히 구체화(시행규칙)  
 \* (예) 게임아이템 등 기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 수정은 신고 대상 제외  
 ⇒ 신고의무 완화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해소하고, 게임창작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게임산업 경쟁력 제고

[조치계획] 업계 의견수렴(24.1분기)을 거쳐 「게임산업법」 시행규칙 개정(게임산업법 개정에 맞춰 '24년중)

### Ⅲ. 규제개혁시스템 혁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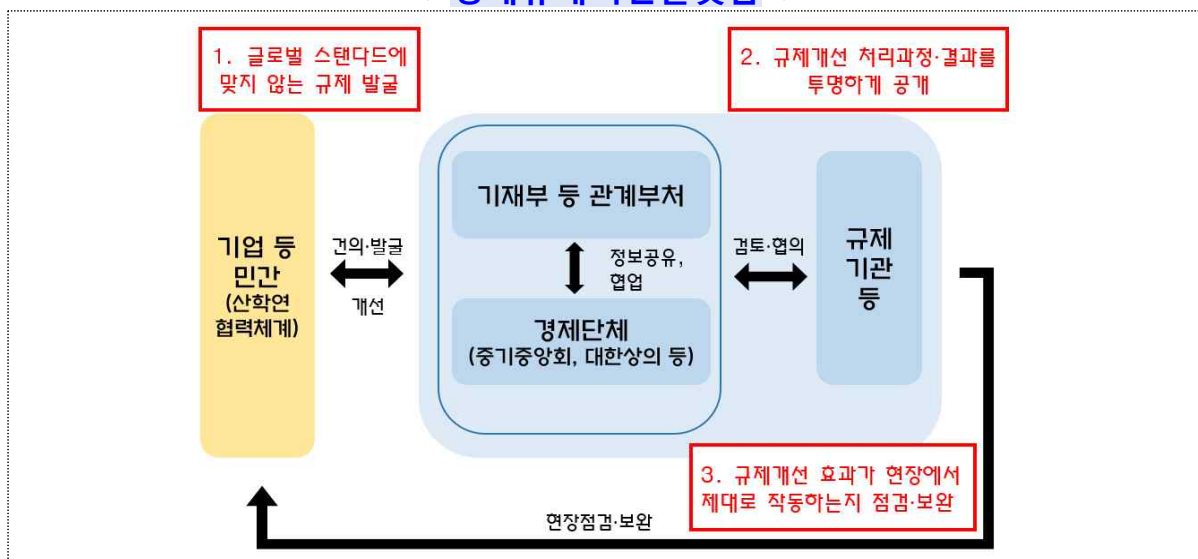
#### 1 경제규제혁신플랫폼 구축·운영

◇ **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사항을 공개하는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구축** ⇨ **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**

□ 경제규제혁신 플랫폼을 구축(규제개혁신문고 내)하여 전방위적 규제개혁 가속화

○ 중기중앙회, 상의 등과 공동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사항을 민간에게 공개 ⇨ 규제개혁의 추동력 강화

#### < 경제규제혁신플랫폼 >



#### ① (규제발굴) **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발굴**

○ 기업, 경제단체, 업종별 협회, 학계 등 산학연 협력체계와 규제 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발굴  
- 주요국 규제 비교·분석, 규제 개선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#### ② (규제혁신) **규제개선 처리과정·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동력 강화**

○ 발굴된 규제는 규제기관의 검토, 관계기관 협의 등 처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

\* 기업들은 회신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직면 등 애로 호소(예: 총리주재 중소기업 규제혁신 토론회(22.8)에 제출된 건의 과제 229건 중 140건에 대해서만 회신)

- 규제개선 검토를 14일 이내 완료(14일 이내 1회 연장 가능)하고 처리결과를 공개, 규제준치가 필요한 경우 규제기관이 3개월내 준치 필요성 소명\*

\*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(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) 준용

### ③ (이행점검) 규제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·보완

- 경제협·단체, 관계부처 등과 공동으로 규제개선 효과의 현장 작동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 마련

## 2 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 제고

◇ **기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, 제도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방안 마련**

### 1 규제샌드박스 성과

- 규제샌드박스 출범('19.1월)으로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운 신기술을 활용하여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적 효과도 달성\*
  - \* 그간 1,035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투자유치 18.2조원, 매출증가 8천억원, 일자리 창출 1만 6천개의 성과 달성('23.9월 기준)
- 또한, 「'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('23.2.15, 국조실)\*」 발표, 행정규제기본법 개정('24.1월 시행)\*\*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노력도 경주
  - \* 동일·유사과제 신속처리절차 마련, 즉시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신속정비트랙 운영 등
  - \*\* 규제특례 심의기한 신설(90일), 부결후 재심의 제도 마련, 부가조건 변경신청제 도입 등
- 제도도입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규제샌드박스 성과가 본격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, 가시적인 성과 제고에 집중할 필요
  - 실증특례 기간 만료 이후 규제부처의 법령 개정(특히 정부입법)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필요

### 2 성과제고방안

- 기발표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실증기간 만료 임박과제 관리시스템 개선(국조실 등)
- 규제샌드박스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방안 마련

## Ⅳ.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

추진 과제		소관부처	추진일정
1. 신산업 분야 현장규제 개선방안			
바 이 오 헬 스	1-1-1.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비의료 기준 명확화 * 기업 수요조사 의견수렴('24.1분기) → 「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」 개정	복지부	'24년
	1-1-2.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* ①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②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안 마련	복지부	①국회계류중 ② '23년
	1-1-3.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공동 설치 및 사용 허용 * 「유전자변형생물체법」 개정안 발의	산업부 과기부 질병청	'24년
	1-1-4.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심사 대상 확대 * 「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·심사 규정」 개정	식약처	'23.11월
에 너 지 · 환 경	1-2-1. 무탄소에너지 리파워링(성능개선) 활성화 *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리파워링 활성화 방안 마련	기재부 산업부 국토부	'24.1분기
	1-2-2. 탄소포집관련 기업(CCUS)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* CCUS 산업 관련 산업특수분류 제정	통계청 과기부 산업부	'24년
	1-2-3. 수소연료전지 등 비상전원 포함 검토 * 현장실사('24.1분기) → 비상전원 포함 적정여부 검토	소방청	'24년
	1-2-4. 저탄소 항공연료 세제지원 확대 검토 *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개정 검토	기재부	'23년
	1-2-5. 발전공기업 경영평가지 국산 기자재 활용 여부 반영 * 국내기업과의 동반 해외진출, 판로지원 등 평가	기재부	'24년
	1-2-6. 직접PPA 계약 관련 부가세 납부절차 간소화 *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69조 개정	기재부	'24년
	1-2-7. 가상전력구매계약(VPPA) 관련 회계처리 기준 명확화 * ①협화·유관기관 통한 회계쟁점 및 처리필요사항 구체화 ②VPPA 관련 회계기준 적용의견서(질의회신) 마련	금융위	① '24.上 ② '24년

추진 과제		소관부처	추진일정
모 빌 리 티 · 로 봇	1-3-1. 공공부문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* 공공부문 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수요처 발굴·보급	기재부, 환경부 등 관계부처	'24.1분기
	1-3-2. 서빙로봇 보급지원 사업을 통한 우수 제조사 육성 * '소상공인 스마트상점' 누리집에 제품 등록 시 평가 절차 개선	중기부	'24년
	1-3-3. 로봇산업 통계 분류체계 개선 * 서비스용 로봇 HSK코드 신설방안 관련 관계부처 협의	기재부 산업부	'24년
	1-3-4. 전기차 전압측정방식 개선 * 유효성검토(24.1.1) → 「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」 개정 추진	환경부	'24년
	1-3-5. 도급승인 심사서류 간소화 * 「도급금지·도급승인 운영지침」 개정	고용부	'23년
	1-3-6. 고고도 드론 비행시험 인프라 확충 * 수도권 드론 시험장 인접 민·군항로 안전성 검토 추진	국토부	'24.1
	1-3-7. 농업용 드론 관련 지자체 지원제도 개선 * 농업용 드론 지자체 보급사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	국토부 농식품부 행안부	'24.1
콘 텐 츠	1-4-1. 영화관 광고 사전심의 완화 * ①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개정 ② 영화관 광고 자율규제에 대한 연구용역 시행	문체부	① '24년 ② '24.1분기
	1-4-2.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대상 및 범위 명확화 * 업계 의견수렴('24.1분기) → 「게임산업법 시행규칙」 개정	문체부	'24년
2. 규제개혁 시스템 혁신			
	2-1. 경제규제혁신플랫폼 구축·운영	기재부 국조실	'24.1분기
	2-2. 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 제고방안 마련	국조실 등 관계부처	'24.1분기

## 참 고

## 과제별 부처 담당자

과제명	부처명	담당과장	담당자
1-1-1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비의료 기준 명확화	복지부 건강정책과	곽순헌 과장 044-202-2810	김상진 주무관 044-202-2806
1-1-2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	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	김한숙 과장 044-202-2420	신현준 사무관 044-202-2412
1-1-3 유전자변형 생물체 연구시설 공동 설치·사용 허용	산업부 바이오융합산업과	송영진 과장 044-203-4290	이혜정 주무관 044-203-4297
	과기부 첨단바이오기술과	김영혜 과장 044-202-6180	이혜라 사무관 044-202-6787
	질병청 생물안전평가과	신행섭 과장 043-719-8040	신정화 연구관 044-719-8041
1-1-4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심사 대상 확대	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TF	김민조 팀장 043-719-3316	최민정 사무관 043-719-3331
1-2-1 무탄소에너지 리파워링 (성능개선) 활성화	기재부 규제혁신팀	이재화 팀장 044-215-4581	박지원 사무관 044-215-4585
	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	이재식 과장 044-203-5360	오승헌 사무관 044-203-5366
	국토부 도시정책과	정진훈 과장 044-201-3706	김용환 사무관 044-201-3707
1-2-2 탄소포집관련 기업(CCUS)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	통계청 통계기준과	박현정 과장 042-481-2060	조환석 사무관 042-481-2052
	과기부 기후환경대응팀	이찬영 팀장 044-202-4511	조현우 사무관 044-202-4542
	산업부 에너지기술과	홍수경 과장 044-203-5150	정권호 사무관 044-230-5157
	산업부 입지총괄과	이영호 과장 044-203-4430	안근영 사무관 044-203-4409
1-2-3 수소연료전지 등 비상전원 포함 검토	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	최재민 과장 044-205-7520	이준원 소방경 044-205-7531
1-2-4 저탄소 항공연료 세제지원 확대 검토	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	양순필 과장 044-215-4130	이금석 사무관 044-215-4131
1-2-5 발전공기업 경영평가시 국산 기자재 활용 여부 반영	기재부 평가분석과	하승완 과장 044-215-5550	박주현 사무관 044-215-5553
1-2-6 직접PPA 계약 관련 부가세 납부절차 간소화	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	조용래 과장 044-215-4320	유은빈 사무관 044-215-4323
1-2-7 가상전력구매계약 관련 회계처리 기준 명확화	금융위 공정시장과	김광일 과장 02-2100-2680	김세화 사무관 02-2100-2693

과제명		부처명	담당과장	담당자
1-3-1	공공부문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	기재부 규제혁신팀	이재화 팀장 044-215-4581	홍혁준 사무관 044-215-4584
		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	류필무 과장 044-201-6880	정윤화 사무관 044-201-6882
1-3-2	서빙로봇 보급지원 사업을 통한 우수 제조사 육성	중기부 디지털소상공인과	장혜수 과장 044-204-7870	이진영 사무관 044-204-7875
1-3-3	로봇산업 통계 분류체계 개선	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	조용환 과장 044-203-4310	박형태 사무관 044-203-4318
		기재부 산업관세과	박경찬 과장 044-215-4411	김진용 사무관 044-215-4433
1-3-4	전기차 전압측정방식 개선	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	류필무 과장 044-201-6880	이정준 서기관 044-201-6946
1-3-5	도급승인 심사서류 간소화	고용부 화학사고예방과	이지윤 과장 044-202-8966	이재희 사무관 044-202-8968
1-3-6	고고도 드론 비행시험 인프라 확충	국토부 첨단항공과	김동현 과장 044-201-4307	남기영 사무관 044-201-4226
1-3-7	농업용 드론 관련 지자체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	국토부 첨단항공과	김동현 과장 044-201-4307	박정권 사무관 044-201-4206
		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	문태섭 과장 044-201-1891	이현 사무관 044-201-1424
		행안부 자치행정과	이방무 과장 044-205-3101	김영준 사무관 044-205-3124
1-4-1	영화관 광고 사전심의 완화	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	강민아 과장 044-230-2431	김하정 사무관 044-203-2436
1-4-2	게임물 내용수정 신고대상 및 범위 명확화	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	이영민 과장 044-203-2441	장동엽 사무관 044-203-2442
2-1	경제규제혁신플랫폼 구축·운영	기재부 규제혁신팀	이재화 팀장 044-215-4581	박지원 사무관 044-215-4585
		국조실 규제총괄정책관	이인용 과장 044-200-2396	정대현 서기관 044-200-2397
2-2	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 제고방안 마련	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	고지숙 과장 044-200-2435	최민영 사무관 044-200-2437